다산포럼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조교수 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장애인이 공론장과 도시 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여러 질문거리와 난제를 던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운동 이 제기하는 사회적 난제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최대 다수의 행복이란 원칙이 소수성의 정치와 만났을 때조 차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칙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와 숫자 를 활용하는데, 숫자에 기반한 정치가 이 경우에도 여 전히 적합한 것인지? 둘째, 신분제의 철폐 이후 현대사 회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능력주의의 신화가 실질 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점점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질서 와 도시 공간의 속도에서 느림이 무기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저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난제들. 첫째 근대 사회에서는 공리주의적 으로 사회의 효용, 일반선(general good)을 추구하는 것이 명목상의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타인의 이익 혹 은 사회의 전체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장애와 느림: 공리주의와 능력주의의 바깥

보편성 혹은 다수에 속하지 않은 권리는 단순히 지엽적 인 이익으로 인식되어 권리의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다.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사회에서는 한정적인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효용을 입증하기 위해 숫 자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 철 엘리베이터 92%의 보급률,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 차 시간 32분 등의 숫자와는 달리, 길거리에서 장애인 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 에 시위로 인해 멈출 경우 발생하는 비장애인의 불편과 평생 자유로운 이동을 하지 못한 장애인의 고통의 총량 은 수치화하고 비교 가능한 것일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숫자를 넘어, 사회 정 의의 요구에 대해 파악하고 응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 현대 국가의 관료제는 이를 어떻게 구현가능하게 하 는지 논의하고 정치는 이를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곧 여당이 될 정당의 대표는 계산에 능숙한 기재부의 관료 처럼 효용과 공리주의적 언변으로, 무정한 현대 관료 제의 쇠 우리를 뛰어넘어 달라는 문명 전환의 절박함 외침에 대응하고 있다.

두번째로 현재 장애인의 저항은 새 정부가 금과옥조 로 여기고 있는 능력주의의 바깥을 보여주고 있다. 경 쟁에 의해 합리적으로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을 선발한 다고 하지만, 사회에는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시 험장에 갈 능력조차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성인 (25-64세) 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중졸 이하가 31.1%, 고졸 45.0%, 대학 이상 23.9%인 반면, 전체 성인 중 중졸 이하는 11%, 고졸 39%, 대학 이상 51% 로 현격한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 이동조차 부자유한 상황에서 교육에 기반한 능력을 키우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정치의 장, 시민의 영역에서 근본적 으로 배제하고 외부화한 능력주의의 정치가 민주주의 에 부합할까? 우리는 능력과 사회의 자원 분배의 개념 을 새로이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저항은 정신없이 가속화 되는 도시와 자본주의의 속도를 멈추게 한다. 물론 서울 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밀집도가 높은 도시이며 서 울의 지하철은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이곳에서 사람들 은 생존을 위해 헉헉 속도를 내며 살아가기에 이 멈춤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의 시위 들은 우리의 도시 환경에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냈다. 이 사람들이 사 회 성원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게 된다면, 숨찬 도시의 속 도는 빠름과 느림의 공존으로 다원화될 수 있다.

이자벨 스탱게르스라는 과학철학자는 현재 사회에 대한 가장 근본적 저항은 일반선의 이름으로 소수의 정 치를 억눌러온 억압에 대한 저항, 가속화하는 사회 질 서에 대한 저항인 느린 운동이라고 한다. 느림의 충격 과 저항은 숨 가쁜 능력주의의 틈새(interstice)를 가 까스로 벌리어, 기존의 민주주의 및 인권의 원칙과 가 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문명 전환기, 새로운 정치 의 성공은 바깥과 느림의 저항에 대한 응답 능력 (response-ability)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社 說

무등산 보존·개발 정치 쟁점화 우려된다

'무등산 보호'의 대명사인 (사)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가 무등산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로 치닫고 있 다. 최근 무보협 소속 70여 개 환경·시민 단체 가운데 50여 곳이 무보협을 탈퇴해 '국립공원 무등산 지키기 시민연대' (이하 시민연대)를 발족한 것이다. 1987년 5월 출범한 무보협에서 30여 년 동안 한목소 리를 내온 단체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전남녹색연합 등 핵심 환경단체의 이탈로 무보협은 사실상 이름만 남게 됐다.

무보협의 분열에는 무등산 난개발과 정 치적 편향 논란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지난 1월 무보협이 무등산 정 상부 개발 논의와 관련해 특정 후보 정책 지지를 담은 성명을 내자 갈등이 증폭돼 소속 단체들의 탈퇴 사태를 불러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보협이 그동안 제기된 무등산 난개발 우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무보 협에서 탈퇴한 단체들이 꾸린 시민연대는

발족식에서 "(산악열차·케이블카 개설 등) 무등산 접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보다, 방송통신 탑 이전 등 정상 복원 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꼬 집기도 했다.

무등산이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 던 데는 무보협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부지를 사들여 보존하는 '무등산 공유화 운동'은 국내 환경 보호 운동의 선구적 사 례로 꼽힌다.

무보협이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무등산 보호의 가치와 정신은 계승되고 실천돼야 한다. 무등산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 연 보존이라는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할 광 주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무등산은 현재 정상 군부대 주둔과 방송통신 탑 등으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보존 과 개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무등산 정상 복 원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결코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확정 임박 지역 현안 반영 이상 없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새 정부 국정과 제 확정에 속도를 내면서 광주·전남 지역 현안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초미의 관 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비 전' 아래 6대 '국정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주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20개 실천과제 에 대해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 에게 최종 보고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광주시는 미래 모 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과 서울~광주 및 광주~부산을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5·18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전남도도 국립 의과대 학 설립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8대 공약 25개 과제의 반영을 위 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윤 당선인도 지난주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가 인공지능(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 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 는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 화를 약속한 바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광주 ·전남 발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아무리 중대한 지역 현안일지라도 여기서 누락되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정치권과 지자체의 유기 적 대응이 절실하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 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광주 군 공항 이 전,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 등 지역 공약들을 반드시 반영해 균형 발전의 토 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명 존중 문화가 아쉽다



卫

기

조 경 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겸임교수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지구를 공유하는 생명체들 중 가 장 잔인한 살상을 하며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종족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 이다. 그 출발점은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학대와 살 생이다.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달군 존속 토막 살인 사건과 지하철역에서의 묻지 마 살인 사건이 있었다. 동시에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한 개 19마리를 살 해하여 암매장한 사건, 길냥이를 잔혹하게 살상하는 과정을 앞다투어 생중계하는 온라인 대화방, 입과 코 일부만 남긴 채 땅속에 개를 묻은 사건, 개의 두 발을 등 뒤로 꺾어서 묶은 뒤 수풀 속에 버린 사건 등이 잇따 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상만 달랐지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혹한 고통을 주 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는 동일하다. 상대적 으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폭력 을 가한 범죄자들에게서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 이력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저술한 미국의 사회학자 클 리프턴 P.플린은 저서 '동물 학대의 사회학'에서 동물 의 생명을 쉬이 여기는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사람을 해 칠 수 있는 잠재적 폭력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을 학대했던 사람이 결국 사람을 해치는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학자들을 통해 익히 알려진 이론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해치는 폭력 행위의 전초적 연습 행 위인 동물 학대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 하자면 그 해법은 '문화'이다. '문화'라는 두루뭉술한 결론을 말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그 '문화'를 만들 것인지 그 방법과 과정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 자체가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할 과제다.

동물 학대를 줄이는 정책적 방법 하나는 '사전 예방 적 문화 교육'이고 나머지 하나는 '후 처분적 대안'이 다. 법과 질서를 제외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문화'이다. 소위 '생명 존중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하루 이틀 교육을 받는다고 생겨 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가슴속에 '윤리'로서 자리 한 후 실생활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문화 이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12년간의 공 교육을 통해 학문과 더불어 사회 질서와 문화를 습득하 게 되고 이후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 구성된다. 그 공 교육 과정에 '생명 윤리 문화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정기적 프로그램으로 의무화한다면 그런 교육을 12년 간 받아온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기성세대가 될 때 비 로소 축적된 문화가 사회생활로 배어 나올 것이다. 이 처럼 생명 윤리가 문화화된 세대들의 동물 학대는 현저 히 줄어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은 좀 다르지만 얼마 전 광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 또한 문화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사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 교육을 단 한 번 도 받지 못한 채 사냥견종을 아무렇게나 키우는 견주에 게 오롯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이다. 수십 년의 징역과 수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처벌이 얼 마나 형식적이고 미미한 수준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지 칠 지경이다. 1991년 처음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의 전 면 개정안이 31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했고, 작년에는 동물의 제3의 민법상 지위도 생겼 다.

너무나 고무적이고 반색할 만한 일임에는 분명하나, 반려동물 유기 억제나 동물 학대의 낮은 처벌 수위, 개 물림 사고 등의 반려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들의 미진함 등 근거나 기준의 모호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

지난 3월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많은 동물 관련 공약 을 발표했었고, 지금 한창인 광주시장 선거 후보들 역 시 선거용 동물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공약들을 유권자들의 입맛 에 맞추어 선거용으로 발표한다고 한들, 위에서 필자 가 주장한 '문화 교육'을 실천할 동물 전담 행정 조직 하나 없는 것이 우리 광주의 현실이다. 운전할 사람도 없는데 자동차를 사 주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 다. 민선 8기에서는 생명 존중 도시 광주시가 그 명성 에 걸맞게 반드시 동물 전담 행정 조직을 설치해 '생명 존중 문화 교육'을 진정성 있게 수립하고 실행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無等鼓 🕡

6·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불꽃 튀는 경 쟁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 에서의 압승을 노리고 있다. 반면, 뼈저린 패배를 겪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민주당에 그리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 대선 패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사로잡을 만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 히려 서울시장 후보 경선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 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안 추진을 놓고 위장 탈당 논란에 빠지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민 주당의 변한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민심의 전반적 반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하고 전 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승리를 마냥 낙관 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는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 시된 여론조사 결과, 윤 당선인의 지지율 은 4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과거 대통 령 당선인들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역 대 최저다. 여기에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도 악재로 꼽히고 있 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 의 각종 논란이 증폭되고 낙마가 이어진 다면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흔히 민심을 바다에, 정치인이나 정당 을 배에 빗대곤 한다. 바 민심의 바다

다는 거대한 배를 뛰우 기도 하지만 단숨에 침 몰시키기도 한다. 정치

인들이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지난 대 선이 그러했다. 아직도 민심은 편안치 못 하다. 코로나19가 휩쓴 민생 경제는 만신 창이고 삶의 여건은 여전히 고단하다. 민 심의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셈이 다. 결국 거친 파도의 원인과 바람의 방향 을 잘 헤아린 후보와 진영이 민심의 바다 를 순항할 것이고, 지방선거의 승패도 거 기서 갈릴 것이다.

/임동욱 이사 겸 선임기자

(FAX 222-0195)

⟨FAX 02-773-9335⟩

인공지능(AI) 광주, 전문 인재 양성이 관건이다



고

기

백으뜸 호남대 AI빅데이터학과 교수

광주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성장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 는 지역의 대학·기업·유관 기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광 주시는 AI 집적 단지를 조성한 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 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AI 데이터센터를 본격적으 로 가동해 국내 대표 AI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려고 한 다. 또한 94개의 인공지능 기업과 기관이 광주에 법인 설립이나 사무소 개소를 마쳤고, 이를 통해 391명의 새 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광주 인공지능 기업 의 인력난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AI 중심 도시라는 타이틀을 보고 광주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인공지능 전 문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숨은 진주' 같은 AI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 인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 되는 AI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 교육생 수만 늘려서 무늬만 소프트웨어

(SW) 개발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학 생과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상누각' (沙 上樓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기초가 부실하고 과 정에 빈틈이 많은 교육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에 발맞춰 AI 교육자 스스 로 깊이 있는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며, 질 높은 커리큘럼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AI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 해 실전에서 필요한 AI 기술에 대한 정보의 최신화를 계 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높이 고 교과의 깊이를 더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을 최적화해야 한다. 현재 인공 지능 교육은 '사람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고려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성공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 는지를 알아야 한다. 학습과학(SoL: science of learning)은 '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을 어떻게 최 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고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며 장기 적으로 기억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수 학습법의 도입으로 인지 신경과학과 교육 심리로 연구된 결과를 실제 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 들에게 최적의 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과학 적 이해에 기반한 교수 환경과 교수 방법으로 학습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 타 지역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AI+X'에 대한 기술은 기업과 학생들에게 매력을 끌기 어렵다. 몇 년 후면 포화 상태가 되어 '레드 오션'으로 변해 버릴 자리 에서 틈새를 찾기보다는 '블루 오션'이 될 만한 융합기 술을 발굴하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새로 운 지역 먹거리와 AI의 융합기술을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특화된 기술을 갖추게 하여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찾는 AI 융합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대학은 AI 집적 단지에 자리매김한 인공지능 기 업과의 긴밀한 연구 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점을 발 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인공지능 융 합 인재를 양성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금이 인공지능과 지역 먹거리 융 합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것이다.

셋째, AI와 지역 먹거리 융합 기술을 발굴해야 한

인공지능 교육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봐야 한다. 단시간의 성과를 위해 덜 익은 과일을 함부로 따 버리면 과일의 참맛을 느낄 수 없다. 즉,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며 교육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 는 것이다. 완성도 있는 교육의 기준과 연속성을 가지 고 AI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배출되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 길 바란다.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52 부 220-0692

부 220-0693

부 220-062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